



「2022년 경찰공무원(순경) 시험대비」

경찰헌법 핵심기출 문제풀이(4)

| 고영동 교수 | 박문각남부경찰학원

<지난호에 이어 ...>

[제3회 변천~국적법]

03.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제3차 개정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나, 기본권실효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.
- ②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을 지향하는 헌법보호의 수단이다.
- ③ 현행 우리나라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는 정부만이 청구권자가 된다.
- ④ 독일의 경우,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가 된다.

정답 ②

해설

위헌정당해산제도는 가치상대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정한 가치에 구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가치지향적(가치구속적)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헌법보호 수단이다.

04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건국헌법(또는 제헌헌법)은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되었고,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.
- ② 1952. 7. 4자로 이루어진 제1차 개헌은 소위 '발췌개헌'이라 하는바,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, 양원제국회,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, 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이 있다.
- ③ 1954. 11. 27자로 이루어진 제2차 개헌은 소위 '사사오입개헌'이라 하는바, 그 주요내용은 초대대통령에 한한 삼선제한 철폐, 대통령 궐위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지위승계,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전환 등이었다.
- ④ 1972. 12. 27자 제7차 개헌으로 소위 '유신헌법'이 탄생하였는바, 유신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,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,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.
- ⑤ 1980. 10. 27자 제8차 개헌에서는,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단임제로 변경되었으나,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.

정답 ②

해설

② 옳은 지문이다. 다만, 양원제 국회는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.

- ① 후단의 서술은 옳으나, 국회의결만으로 제정되었다. 헌법개정에 있어 필수적 국민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제5차 개헌부터이다.
- ③ 대통령 궐위시에는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다.
- ④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, 또한 7차 개헌이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.
- ⑤ 대통령의 선출은 간선이었으나,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닌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이루어졌다.

Ⅰ 역대 헌법의 개정 방식 Ⅰ

헌법 개정	개정 방식
제헌~4차 개헌	국회의결(국민투표×)
5차개헌(1962)	국민투표(국회의결×)
6차개헌(1969)	국회의결 + 국민투표
7차, 8차개헌	국민투표(국회의결×)
9차(현행 헌법)	국회의결 + 국민투표

※ 국회의결 + 국민투표를 모두 거친 헌법 : 6차 개헌, 9차 개헌

05. 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헌법재판소는,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.
- ② 국적법에 의하면,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.
- ③ 국적법에 의하면,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일반귀화를 할 수 있다.
- ④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"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"이 제정되었다.

정답 ②

해설

② 국적법에 의하면,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(국적법 제10조 제1항).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(국적법 제18조 제1항, 제2항).